

공 개



의안번호	제 188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6. 4. (임시 제3차)

의
결
사
항

(주)우리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6. 4.

1. 의결주문

(주)우리은행(이하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의신청인이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20.3.4. 제4차 금융위 의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5.22.)함에 따라 그 당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위원회의 원조치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4. 참고사항

가.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원조치(붙임1)

나. 관련 규정(붙임2)

<별 지>

금융위원회 결 정

이의신청인 (주)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원 결 정 2020.3.4. 제4차 금융위원회 의결
(주)우리은행 - 과태료 197.1억원

주 문 이의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금융위원회가 2020.3.4.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과태료(197.1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원조치 부과사유

이의신청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및 사모펀드 광고규정을 위반함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판단해 줄 것을 요청

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이유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조치를 유지함이 타당
(이의신청 기각)

(1) **(원조치의 적법성)** 이의신청인은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음

원조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5,000만원, 위반동기는 '상',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 금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6,000만원, 위반동기는 '상',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5억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5,000만원, 위반동기는 '하',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4억8,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녹취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5,000만원, 위반동기는 '중', 위반결과는 '중대'로 산정하여 부과금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1억원, 213건 중 76건에 대해서는 위반동기 '상', 위반결과는 '중대'로, 137건에 대해서는 위반동기 '상', 위반결과는 '보통'으로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동 부과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배 구조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이의신청사유의 부존재)**
다음의 사유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내용 관련) 이의신청인은 ‘실효성’이라는 추상적 요건을 명확한 기준 없이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해석하고 결국 사후에 발생된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에서 제시된 내부통제유형에 기초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형태, 재무상황, 규모나 조직,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신상품 출시, 판매,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임직원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정한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의신청인의 경우 펀드 M/S 1위를 경영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 출시, 판매,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등 단계별 내부통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이행 관련) 이의신청인은 지배구조 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 사건은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이 아니라 미준수가 문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모펀드 출시과정에서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아, 금리변동 등 시장변화로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360개 중 357개(99.2%)를 적정성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상품선정위원회 결과를 위원 등에게 통지하거나 상품선정위원의 선정 및 교체 사실을 소속부서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실무자가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있었음에도 관련 임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었고

판매한 사모펀드의 위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업무범위, 업무절차, 전산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내부기준과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상품의 위험등급과 무관하게 적합성 보고서상 권유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함에 따라 DLF 등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상품에 대해 상품권유 사유를 ‘안정성 고려’를 선택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368건(적합성보고서 징구 대상 1,025건중 35.9%)이나 발견되었으며

사모펀드 출시 및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적절하게 보고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이의신청인은 금번 과태료 부과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존부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과거 내부통제 관련 조치사례와 비교할 때 신청인에 대한 6월의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사유에 중대한 오인은 없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나아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까지 유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3)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 이의신청사유의 부존재)** 다음의 사유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투자광고 대상 판단의 위법)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일부가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반행위 건수에 모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6.2.15.)에 따르면 투자광고는 개별상품 특정 여부가 아니라 “매매유인의 목적 유무로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상품 관련 내용을 SMS 등으로 발송하는 것은 신규 거래를 유발할 수 있어 투자광고 규제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위반행위 개수 판단의 위법)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문자 발송 행위 전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거나, 적어도 각 지점별 또는 주된 행위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과태료 산정 시 많은 양의 문자를 보낸 직원과 적은 양의 문자를 보낸 직원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

금융위원회는 '13.6월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도입 이후 일관되게 동일자·동일직원 발송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음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이의신청인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위반동기를 ‘상’으로 산정하는 등 이의형량에 하자가 있으며,

과거 사례와 달리 동 건만 감경 미적용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은 준법감시실의 광고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메시지 전송유형을 일반통지성으로 변경하여 발송하여 위반동기는 ‘상’이 적절하며,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법률상 최고한도액 10배 초과시 감경 처리 방향(‘19.6월)’에 따라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경 없이 전액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4) **(불완전판매 관련 이의신청사유의 부존재)** 다음의 사유로 불완전판매 관련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이의신청인은 사후 수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동 건 처분이 설명의무 실제 이행 여부가 아닌 서류작성 등 기술적 누락에 의한 것인 등 과태료 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를 산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나

분쟁조정 결정 수용 등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검사·제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에도 이를 ‘사후 수습 노력’으로 인정하여 제재 감면한 사례가 없고

본점의 왜곡된 상품 안내로 영업점에서 상품 판매 시 구체적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검사대상계좌 2,006건 중 법규 및 내규 위반계좌는 64.9%에 달하는 등 단순한 기술적 누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3. 결론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의신청 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그 밖에 원조치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자 함

(붙임1)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원조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우리은행 : 과태료 197.1억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과태료)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0.5억원, 설명의무 위반 5.4억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4.8억원, 녹취의무 위반 0.8억원,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185.6억원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별표4]

2. 조치사유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경영진은 ▲▲그룹의 목표설정계약서(KPI), 펀드신규가이드* 등을 통해 펀드 MS 1위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등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일반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한 반면,

* ▲▲그룹에서 영업점 KPI와 별도로 영업본부·영업점별로 부여한 공모·사모펀드 판매목표로서 일별로 ▲▲그룹, 영업본부장 등에게 송부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음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상품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상품출시의 적정성 및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을 선정·판매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¹⁾로 이어진 불완전판매(1,302건²⁾) 및 민원(200건³⁾)을 초래하였음

1) 만기가 도래한 독일국채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의 경우 판매계좌 수 617개, 투자원금 합계 1,217억원, 손실금액합계 538억원, 평균 손실률 44.2%

2) 전체 검사대상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판매 건(2,006건)의 64.9%로서, 자본시장법 위반 427건, 내규위반 1,050건이 확인되었음(법규 및 내규 동시 위반 175건)

3) '19.12.10. 기준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관련 금감원 및 우리은행 접수 민원 건수

나. 설명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9.2.20. ~ 5.23. 기간 중 9명의 투자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9건(가입금액 11.4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9.1.22. ~ 6.18. 기간중 21명의 투자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21건(가입금액 27.5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라.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우리은행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1.29. ~ 3.6. 기간 중 2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2건(가입금액 2억 8천만원)을 판매하면서 잡음만 들리는 등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녹취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마.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ㄴㄴㄴ 등 56명은 2018.9.3. ~ 2019.4.26. 기간 중 1,547명의 고객에게 125회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4,022건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ㄴㄴㄴ 등 65명은 2018.9.3. ~ 2019.3.22. 기간 동안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16,332명에게 180회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8,499건을 발송하였음

※ 고객정보 마케팅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한 광고행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40조 제7호)

-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ㄴㄴㄴ 등 44명은 2018.9.3. ~ 2019.3.14. 기간 중 4,225명의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등 사모펀드를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6,684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투자광고) ①~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6.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0. (생략)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25. (생략)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49. (생략)

②~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자문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자문업자가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와 범위
다. 투자자문 제공 절차와 투자자문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규모 및 산정방식
라. 그 밖에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0조(투자광고) ①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4. (생략)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생략)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3~13. (생략)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버.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최소영업자본액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5.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②~③ (생략)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10.~14.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③~⑥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쿠. 법 제40조제7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2,40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은행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2100-2676	02-3145-7062